

## ‘영토문제’를 넘어설 지평 그리기

가쓰라지마 노부히로桂島宣弘

2010 년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尖閣諸島’ (다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 러시아와 ‘북방영토’ 를 두고 일어난 대립 등, 일본과 주변 여러 나라 간의 ‘영토문제’ 가 첨예하게 발생한 한 해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영토문제’ 를 누구의 ‘고유한 영토’ 인가에 관한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물론 근대국민국가의 영토를 과거 안에서 찾으려 하는 ‘고유한 영토’ 라는 논의 자체가 허망으로 가득 찬 것이다), 근대일본의 침략전쟁, 식민지 지배의 역사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역사인식의 문제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과 중국, 한국, 대만,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문제’ 는 모두 19 세기에 들어서부터 근대일본이 행한 아시아 침략전쟁이 불러일으킨 문제들인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실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가 쟁점인 것이다.

이는 각각의 ‘영토문제’ 가 지닌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센카쿠 열도’ 를 보자. 도쿠가와徳川 시대까지 류큐琉球가 독립한 왕조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류큐왕조 남서부에 있는 도서島嶼들은 ‘자국영토’ 로서 전혀 인식되지 않았었다(무엇보다도 18 세기 말까지 도쿠가와 막부는 ‘자국영토’ 라는 인식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 후 메이지明治 정부는 ‘류큐처분琉球処分’ 을 단행하기에 이르고, 1885 년에는 이들의 편입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1885 년까지만 해도 청나라는 메이지 정부에게 있어서 여전히 ‘대국大國’ 이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대립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획책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었다(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내무경內務卿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오키나와沖繩 현령의 국가의 영토임을 표시하는 ‘국표國標’ 설치에 관한 질의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결국 1895 년, 청일전쟁에서의 승리가 확정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나서야 부근 해역의 도서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일본외교문서』와 『공문류취公文類聚』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일본으로 편입된 것은 ‘구바지마九場島’와 ‘우오쓰리시마魚釣島’의 두 섬뿐이며, 오늘날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이쇼지마大正島’, ‘기타코지마北小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오키노기타지마沖ノ北島’, ‘오키노미나미지마沖ノ南島’ 등(모두 일본측 호칭)을 포함하는 ‘센카쿠 열도’ 전체가 편입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고유한 영토’ 라는 논리에 근대일본의 ‘류큐처분’ 과 중국침략의 역사적 과정이 은폐되어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메이지 정부조차

주장하지 않았던 도서까지도 일본의 영토로 삼으려 한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케시마竹島’에 관해서는 확실히 도쿠가와 시대에 이미 조선왕조와 몇 차례에 걸친 ‘절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당시에 ‘다케시마’라고 불리었던 섬은 실제로는 울릉도였으며, 현재 일본 측이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는 섬은 ‘마즈시마松島’라 칭해지고 있던 점 등, 문제가 조금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도쿠가와 막부가 결국에는 ‘다케시마’를 조선왕조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이에 관해서는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 등을 참조할 것. 다만 여기서 말하는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가리킨다. 하지만 막부는 하나의 돌섬에 지나지 않는 ‘마즈시마’를 ‘다케시마’와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다케시마’를 조선왕조의 영역으로 보았다는 것은 ‘마즈시마’에 관해서도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메이지 정부 역시 당초에는 이와 동일한 방침을 취하고 있었는데(돗토리현鳥取県이 토지면적의 편입을 신청했으나 내무성은 이를 거절하고, ‘다케시마 혹은 마즈시마라 하는’ 섬은 조선왕조의 ‘관도’에 속한다고 명언한다), 이 곳에 대한 영유를 별안간 시야에 넣기 시작하는 것은 ‘센카쿠 열도’와 마찬가지로 근대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통해서였다. 즉, 1905년이 되면 메이지 정부는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를 다시금 ‘다케시마’로 고쳐 부르고 군사적 이유를 들어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킬 것을 결정했다. 1905년이 청일전쟁을 거쳐 한국의 보호국화, 조선의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시기였음을 기억하라. 1906년에 이러한 사실이 대한제국 내에 알려지게 되고 이에 『황성신문』 등은 강하게 항의하지만, 이미 한국통감부가 설치된 상황에서(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그와 같은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북방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한 가지만 언급해두겠다. ‘북방영토’는 도쿠가와 시대에 영유가 확정된 것으로서(1855년의 러일화친조약), 근대일본의 아시아 침략과는 맥락을 달리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원래 아이누アイヌ가 거주하던 지역에 무리하게 경계선을 긋는 작업이었으며, 아이누 사람들의 생존권을 박탈했다는 의미에서는 근대일본의 제국화와 관련지어 생각해야만 할 문제이다. 이는 자칫 잊혀지기 쉬운 시점이기에 부언해두고자 한다.

그리고 패전직후의 일본정부가 ‘북위 30도 이남의 난세이南西 열도’, ‘울릉도, 다케노시마竹島の島’, ‘하보마이齒舞 열도 및 시코탄토色丹島’ 등을 ‘구일본점령지역’이라 하여 이른바 ‘고유한 영토’와 구분하고 있었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곧 오늘날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고유한 영토’ 들은, 모두 패전 후에 바로 그 일본정부에 의해 부정되었던 것이다. 이는 패전으로부터 65 년이 경과함에 따라 정부의 전쟁책임과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가 이토록 풍화, 후퇴하게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가 ‘센카쿠 열도’, ‘다케시마’, ‘북방영토’ 가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어야겠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필자는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근대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야말로 오늘날에 이르는 ‘영토문제’ 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직시하는 일이다. 따라서 그 ‘해결’ 이란, 침략과 전쟁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입각하여 역사서술을 행하지 않는 한 도저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은-굳이 말하자면-매우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이와 같은 전제에 불과한 지점이다.

그런데 ‘영토문제’ 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근대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명확히 밝히는 역사서술로부터 출발하여, 여기에서 한 발 더 내딛을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역사적으로는 ‘국경’ 에 사로잡혀있지 않았던 동아시아와 일본열도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입각하고, 나아가 이러한 영역을 지구전체를 기술하기 위한 양식으로서 확립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야말로 필자가 이 글에서 주장하려는 바이다. 이와 같은 양식으로서 지금 필자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 ‘횡단국가적, 초국가적, 통국가적’ )이다. 이 개념에 관해서는 이전에 다른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국의 뛰어난 역사학자 윤해동이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인용해두겠다.

“인류의 역사 특히 근대 세계체제의 역사는 일국적 단위를 전제로 해서만 이해되어 왔던바, 그것이 바로 근대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었다. 하지만 국가를 초월하고, 국가 사이를 횡단하며 관통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인류 삶의 발자취를 올바르게 볼 수 없다는 차각에서 제기된 것이 트랜스내셔널 역사학의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란 일국사를 넘어서려는 대안적 역사로서 제기된 것이다. (중략) 최근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지구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시도, 둘째, 중심에 대한 주변의 문제제기, 셋째, 국사(national history)의 이분법적 시도를 넘어서려는 시도, 넷째, 지역사(regional history)의 폐쇄성에 대한 우려 등이다. 글로벌 히스토리란 근대역사학의 기초인 일국사를 넘어서되,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주변과 소수자를 중심으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역사를 새로이 이해하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인간 중심의 역사를 상대화함으로써 생태사적 문제의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지구사 연구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트랜스내셔널한 역사기술을 구체적으로 실천해가기란 매우 곤란하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센카쿠 열도’, ‘다케시마’가 동아시아의 여러 사람들의 생활과 교류의 〈장〉으로서 존재해왔다는 중요한 사실이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다케시마’를 예로 들어보자면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의 『다케시마 고竹島考』(1828년 완성, 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에는 ‘고로古老’가 ‘저 쪽의 뱃사람들과도 화순하게 일을 도모하는바, 함께 일을 할 때는 긴 시간 상대방의 배가 서로 지나다녔다’고 슬회한 점이 전해지고 있다. 분명 이 당시에는 이미 오카지마를 포함하여 영유권이 의식되기 시작했으며, 『다케시마 고』역시 돗토리번藩 측의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기술된 것이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국가의 ‘정사’(곧 내셔널 히스토리)와는 다른 ‘지역사회의 생업의 역사’로서의 성격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기에, 바로 ‘다른 일을 함께 행해’(=공동이용)야 한다는 ‘고로’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리라.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란, 긴 시간 국가의 ‘정사’가 묵살해온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점이 있다. 이 글을 작성하던 당시에 일본열도에서 유사 이래 최대라 불리는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으며, 후쿠시마福島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이 국제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논평을 하기가 힘든데, 천재天災와 인재人災가 뒤섞인 재해를 눈앞에서 겪으면서 다시금 트랜스내셔널한 인식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번 재해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전지구적인 규모에서 행해야 할 인간의 생활양식의 전환과 근대를 지표로 삼아온 가치관으로부터의 전환, 그리고 ‘영토문제’ 등 민족국가의 안에서 안주해왔던 문명관 그 자체의 전환이 아닐까? 우리들은 일본호가 아닌 지구호의 시민임이 새삼스레 드러나는 와중에 그러한 점들을 떠올려보았다.